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 최근에는 민선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고, 각계각층에서는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최근 5년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 세외수입 등에 대한 개편이 언급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취지가 다소 변질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와 적정 인상률 및 향후 지방소비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1.2 연구내용

- 첫째는 지방소비세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함

- 둘째는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소비세의 규모, 배분방식,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함
- 마지막 셋째는 위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지방소비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을 제시함

2 주요 연구결과

2.1 재원규모의 문제

- 중앙정부는 2014년 지방소비세율 6% 추가 인상분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보전은커녕 1,204억 원의 손실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을 취득세 인하 관련 지방소비세 서울시 보전액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전망치 6,108억 원보다 1,204억 원이 부족한 4,904억 원임

표 1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서울시 손실 예상액

(단위 : 억 원)

구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감면 전망[A]	취득세 감면분 지방소비세 보전전망[B]	증감액 (B-A)
전망액	6,108	4,904	△1,204

주 : 지방소비세는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 104.03%를 반영한 수치임

출처 : 서울시, 2014, 내부자료

- 복지정책의 확대와 생활권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
- 최근 4년 (2011~2014년) 서울시 예산 평균증가율은 3.7%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약 11%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11% 중 6%를 제외한 5% 대에서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표 2 서울시 전체 및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2011~2014년)

(단위 :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시 전체예산 (A)	193,168	199,496	206,287	215,498	3.71%
서울시 복지예산 (B)	44,193	47,410	51,659	60,285	10.91%
비중 (B/A)	22.88	23.76	25.04	27.97	6.92%

출처 : 서울시, 2014 지방재정협의회 ; 서울시 재정여건 및 주요 건의사항, 2014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2.2 배분구조의 문제

- 지방소비세는 주민 1인당 세출규모를 무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배분 가중치를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을 수도권과 지방에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수많은 예산지표 중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외형적 지표들만 보면 서울시가 단연 상위권에 위치함
 - 재정자립도 : 86.1%(전국평균 50.1%)로 전국 1위
 - 예산규모 : 26조2천억 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순위 차지

표 3 시·도별 통합재정자립도

(단위 : %)

단체명	재정자립도	단체명	재정자립도	단체명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0.1	광주	44.0	전북	27.0
서울	86.1	대전	51.7	전남	25.5
인천	59.3	울산	70.0	경북	29.9
경기	69.3	강원	28.2	경남	42.0
부산	55.4	충북	36.0	제주	33.3
대구	49.3	충남	38.1	세종	45.5

주 : 2014년도 순계 일반회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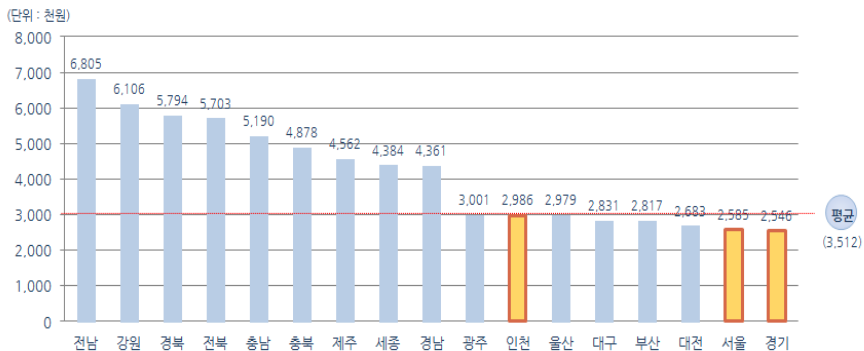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pp266~270

-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안분되는 세출예산액은 2,585천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인 3,512천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4 시·도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단위 : 천 원, 명)

단 체 명	주민 1인당 예산액 (A=B/C)	예산규모 (B)	인구수 (C)	단 체 명	주민 1인당 예산액 (A=B/C)	예산규모 (B)	인구수 (C)
전국 평균	3,512	179,631,409,823	51,141,463	강원	6,016	9,278,642,822	1,542,263
서울	2,585	26,220,359,168	10,143,645	충북	4,878	7,672,187,859	1,572,732
인천	2,986	8,599,665,164	2,879,782	충남	5,190	10,627,246,985	2,047,631
경기	2,546	31,148,405,929	12,234,630	전북	5,703	10,682,441,237	1,872,965
부산	2,817	9,938,403,365	3,527,635	전남	6,805	12,978,572,519	1,907,172
대구	2,831	7,081,550,000	2,501,588	경북	5,794	15,641,051,000	2,699,440
광주	3,001	4,420,664,680	1,472,910	경남	4,361	14,540,083,233	3,333,820
대전	2,683	4,112,777,141	1,532,811	제주	4,562	2,709,141,509	593,806
울산	2,979	3,444,742,296	1,156,480	세종	4,384	535,474,916	122,153



주 1 : 2014년도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기준임

2 :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산정공식은 '자치단체 예산규모/주민등록인구수(2013.12.31 기준)'임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p354

-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1인당 안분되는 세출예산액은 최하위를 기록함
- 위와 같은 상황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외의 타 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권외 비수도권보다 불리한 입장을 증명하는 것임
- 이는 지방재정 판단 시 단순히 지자체 및 예산의 외형적인 규모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혜택에서 비수도권보다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3 배분지표의 문제

- 지방소비세 중 부가가치세의 5%를 안분하는 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는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당초 정부는 지방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자체로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 그러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 내 소비’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함
 - 예를 들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 사용할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에서 소비활동을 하였을 때 소비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세는 전남이 아니라 서울시에 귀속되는 구조임
-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에 의해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현재로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대체할 만한 적정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이 지표가 권역별 지방소비세를 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음

2.4 배분기준의 문제

-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일괄 설정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배분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수도권인 인천광역시만 보더라도 비수도권인 부산과 경남보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이 낮게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역별가중치가 낮아 지방소비세 배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표 5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 및 권역별 가중치 적용 여부 결과 비교

(단위 : 억 원, %)

지역	민간최종소비지출 (백만원)	가중치가 없을 경우		가중치를 둔 경우		차액(A-B)
		안분지수	배분액(A)	안분지수	배분액(B)	
전국	5,309,877	100.0	26,789	100.0	26,789	0
수도권 소계	2,952,131	55.60	14,894	32.84	8,797	6,097
서울	1,435,207	27.03	7,241	15.96	4,277	2,964
인천	266,656	5.02	1,345	2.97	795	551
경기	1,250,268	23.55	6,308	13.91	3,726	2,582
비수도권 소계	2,357,746	44.40	11,895	67.16	17,992	-6,097
광역시(총 5지역) 소계	1,035,356	19.50	5,224	23.03	6,170	-947
부산	365,825	6.89	1,846	8.14	2,180	-335
...						
도(총 8지역)소계	1,322,390	24.90	6,672	44.13	11,822	-5,150
...						
경남	305,577	5.75	1,542	10.20	2,731	-1,190
...						

주 : 2010년 기준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25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① 수도권 지역의 미수입분에 대한 교부금 발생, ② 2019년 이후 기금 전액 소진, ③ 모호한 출연 기준으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① 수도권 지역의 미수입분에 대한 교부금 발생
 - 현행법 상 수도권 지역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항목으로 간주함
 - 이에 따라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은 ‘교육비 특별회계’,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측면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납부하게 됨
- ② 2019년 이후 기금 전액 소진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 등 2가지 용도로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현재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재정지원계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매년 기금의 전액을 소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적립금이 없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됨
- ③ 모호한 출연 기준으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준액을 가지고 13개 비수도권 지자체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해, 심의 단계에 있음
 - 법령 및 13개 비수도권 지자체는 발전기금의 출연규모를 지방소비세의 35%로 주장함
 - 반면, 서울시는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약 3,000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출연비율(지방소비세액의

- 35%)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당시 입법 취지인 ‘총 조성 규모 3조 원’이라는 규정이 미비하여 출연규모가 늘어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도 취득세 감면 등으로 지방세수가 급감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마저 적기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입법 당시와 비교해서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져 있으므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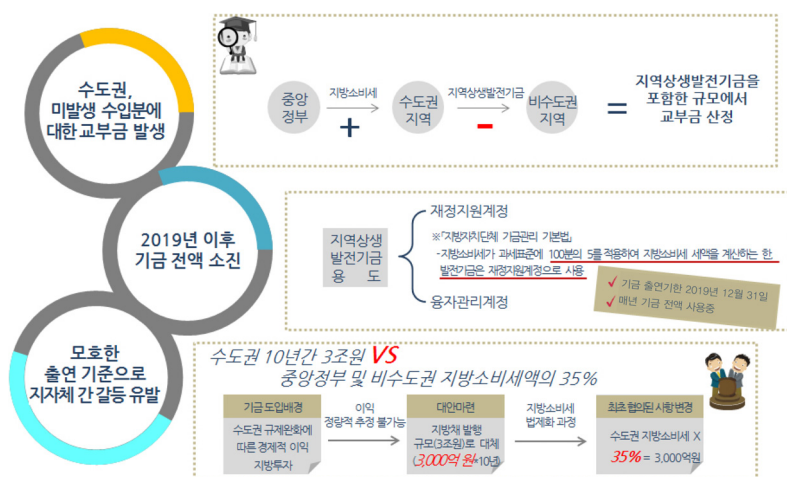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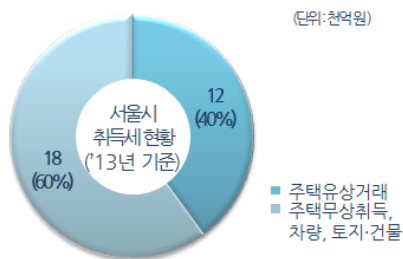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

3 정책 건의

3.1 중앙-지방 간 신뢰에 근거한 재정정책 필요

-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임
- 2013년 기준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인 13조 8,000억 원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

- 지 않은 채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을 발생시킨
-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주요내용 : 6억 원 이하 주택은 당초 2%에서 1%,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하고,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 또한 당초 2%에서 1%로 인하함
-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정부 정책 발표일인 2013년 8월 28일로 소급적용함
-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수 확보에 큰 타격을 입히는 요인이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2014년 지방소비세 규모 6% 추가 인상분은 ‘새로운 세수 발생’이 아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 조치’에 불과함
-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규모 6%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 651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 지방정부와 달리 이를 보전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 서울시의 연간 취득세 규모는 약 3조 원 규모로 이 중 ‘주택 취득세’가 4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취득세 영구 인하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타 지자체는 보통 교부금으로 보전이 가능함



- 그러나 서울시는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로 큰 타격이 예상됨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불교부단체는 총 7개 지역(서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임

그림 2 서울시 취득세 현황(2013년)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2013

- 즉,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명확하게 다른 성격의 재원으로 취급해야 할 것임

3 2 국고보조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

-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7년 32.0조 원에서 2012년 52.6조 원으로 약 20.6조 원 증가하였으며, 10.6%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중 또한 2007년 28.6%에서 2012년 34.8%로 지속해서 증가함
-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인 반면, 국고보조사업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은 16.5%로 큰 차이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사용용도가 지정된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곧 지방재정 부담을 의미함
-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는 그 규모가 연평균 16.0% 증가한 반면, 그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연평균 2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6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2008~2013년)

							(단위 : 조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지방예산[A]	112.0	125.0	137.5	139.9	141.0	151.1	6.3%
국고보조사업[B]	32.0	35.0	41.8	46.7	48.6	52.6	10.6%
(비중 B/A)	(28.6)	(28.0)	(30.4)	(33.4)	(34.5)	(34.8)	
- 국고보조금 (구성비)	20.9	22.8	26.5	29.2	30.1	32.1	9.0%
	(65.3)	(65.1)	(63.4)	(62.5)	(61.9)	(61.0)	
- 지방비부담 (구성비)	9.7	12.2	15.2	17.5	18.5	20.6	16.5%
	(30.3)	(34.9)	(36.4)	(37.5)	(38.1)	(39.2)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구성비)	7.8	11.7	13.9	13.7	14.7	15.5	16.0%
	(73.6)	(69.6)	(69.5)	(68.8)	(68.7)	(67.7)	
- 지방비부담 (구성비)	2.8	5.1	6.1	6.2	6.7	7.4	24.4%
	(26.4)	(26.4)	(30.5)	(31.2)	(31.3)	(32.3)	

출처 : 김현아, 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p15(원자료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 3 지방소비세의 권역별 가중치 조정 필요

3 3 1 서울시 국가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등적용

-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타 시·도와 차등 적용됨에 따라 98개 사업에 대하여 약 1조 3,690억 원('14년 기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중 복지사업에 대한 추가 부담이 1조 3,067억 원으로 약 95%의 비중을 차지함
- 향후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표 7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및 서울시 추가부담

(단위 : 억 원)

부문	사업명	기준보조율		추가부담
		서울	타 시·도	
계	총 98개 사업			13,690
사회복지	소계(81개 사업)			13,067
	영유아보육료	35	65	3,315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50	80	2,373
	의료급여 사업	50	80	2,209
	가정양육수당 지원	35	65	1,636
	기초연금 지급	69	78	869
	보육 돌봄 서비스	20	50	691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0	70	267
	중증장애인연금	50	70	197
	자활근로사업	50	80	171
	어르신 일자리사업	30	50	166
	어린이집 지원	20	50	15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70	148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30	50	103

표 계속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를 차등지원 및 서울시 추가부담

부문	사업명	기준보조율		추가부담
		서울	타 시·도	
도로·교통	소계(7개 사업)			601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	40	60	525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0	40	26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40	60	25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4	18	11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0	50	8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2	18	5
문화·관광	소계(2개 사업)			5
기타	소계(8개 사업)			17

출처 : 서울시, 2014, 예산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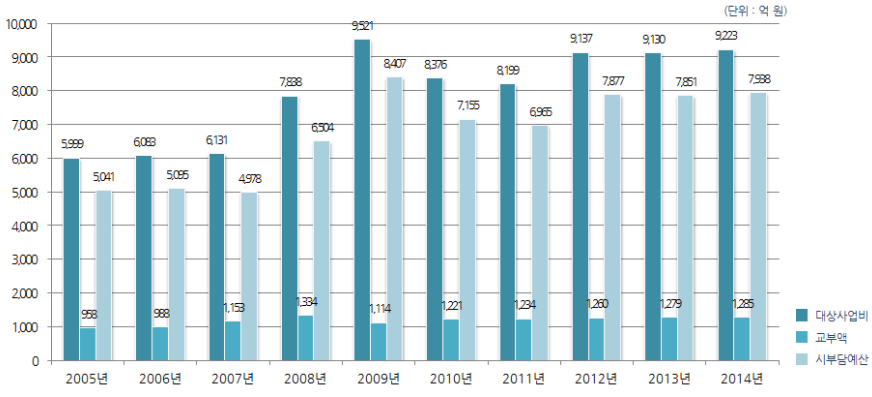
3 3 2 지방이양산업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압박 증가

- 현재 서울시는 지방이양사업 중 전체 사업비의 86%를 시 예산으로 충족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2005년 분권교부세를 신설했지만, 10여 년 동안 327억 원만 증가함
 - '05년 958억 원 → '14년 1,285억 원
- 반면, 지방이양사업을 위한 서울시 부담 예산액은 약 3,000억 원 증가함
 - '05년 5,041억 원 → '14년 7,938억 원
- 현재 지방이양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증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표 8 서울시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비 부담 현황(2005~2014년)

(단위 : 억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상사업비	5,999	6,083	6,131	7,838	9,521	8,376	8,199	9,137	9,130	9,223
분권교부액	958	988	1,153	1,334	1,114	1,221	1,234	1,260	1,279	1,285
시부담예산액	5,041	5,095	4,978	6,504	8,407	7,155	6,965	7,877	7,851	7,938



출처 : 서울시, 2014, 예산과 내부자료

3 3 3 수도권 역차별 해소

- 최근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징수 부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기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방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됨
-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하여 취득세 감소분(2.4조원)은 수도권이 더 크지만, 현행 제도(권역별 차등 가중치)상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 순증은 비수도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 취득세 감소분 : 수도권 1.3조 원 > 비수도권 1.1조 원
 -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 순증 : 수도권 0.5조 원 < 비수도권 1.8조 원
- 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출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이 이전보다 더욱 악

화될 것으로 우려됨

-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지원 대상 인원 추이 : '11년 13만 6,357명
→ '14년 43만 8,856명
- 서울시 기초연금 연간 소요액 추계 : '13년 5,990억 원(1,136천명)
→ '20년 18,641억 원(1,556천명)
- 즉, 지방재정은 지방세입 위축과 지방세출 확대에 따라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견됨
- 지방세입 위축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인 지방세 기반 약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성격상 지방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한편,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지방세출 확대는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세출 팽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큼
- 특히, 베이비부머의 약 43%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 보험, 의료비 등의 사업 추진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됨
- 경기 22%, 서울특별시 21%, 인천광역시 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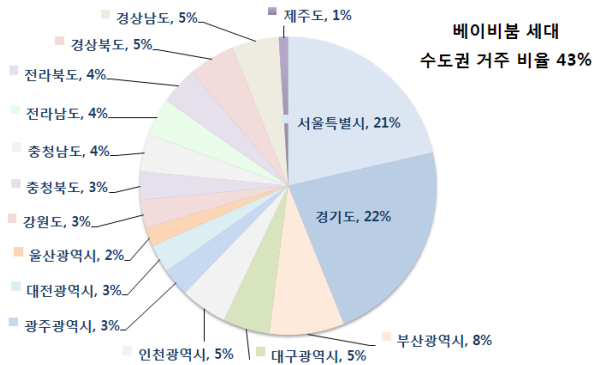


그림 3 베이비붐 세대 지역별 분포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 자료집, p6

3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3 4 1 수도권 지역의 ‘교육비 특별회계’ 및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조정

- 현행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함에 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간주함에 따라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은 이중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미발생수입으로 처리한 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

현 행	개 선
- 교육비 특별회계 = 지방소비세액 X 10.0% - 조정교부금 = 지방소비세액 X 21.0% ※ 지방소비세는 보통세 세목 중 하나 ※ 조정교부금 2013년 20.5%로 운영	- 교육비 특별회계 = (지방소비세액 - 지역상생발전기금) X 10.0% - 조정교부금 = (지방소비세액 - 지역상생발전기금) X 21.0%

그림 4 교육비특별회계 및 조정교부금 개선 방안

3 4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용자관리계정’ 활성화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완료되는 2019년에 기금 전액이 소진됨
- 이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방채제도의 선진화, 지역발전 지원 효과 제고 측면에서 용자관리계정 활성화가 필요함
- 용자관리계정활성화를 위한 ‘방안 1’은 지방소비세 확대분에 대해 용자관리계정을 도입하는 것이며, ‘방안 2’는 권역별 가중치 조정 후 확대되는 수도권 지방소비세분을 용자관리계정으로 활용하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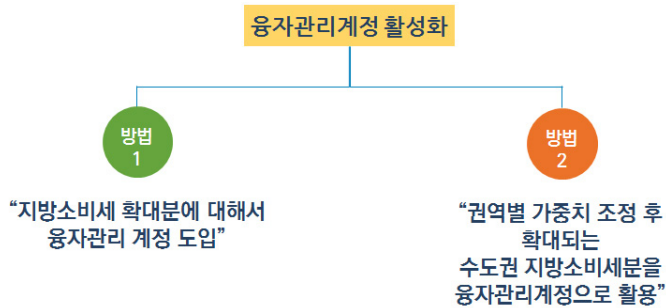


그림 5 용자관리계정 활성화 방안

- 권역별 가중치 조정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적정규모는 권역별 가중치를 ‘일부조정’ 및 ‘폐지’했을 경우 40~45%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비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9 권역별 가중치 조정 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적정규모 예상

(단위 : 억 원)

구분		현행 (100:200:300)	권역별 가중치 일부조정 (100:150:200)				권역별 가중치 폐지 (100:100:100)			
안분율		15.28	19.26				26.0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35%	35%	40%	45%	50%	35%	40%	45%	50%
지 방 소 비 세	지방소비세 규모 (C)	4,843*	6,103				8,248			
	조정교부금 (D=C*20.5%)	993	1,251	1,251	1,251	1,251	1,691	1,691	1,691	1,691
	지역상생 발전기금출연금 (E=C*35~50%)	1,695	2,136	2,441	2,746	3,052	2,887	3,299	3,712	4,124
	교육청전출금 (F=C*10%)	484	610	610	610	610	825	825	825	825
	순세입 (G=C-D-E-F)	1,671	2,106	1,800	1,495	1,190	2,846	2,433	2,021	1,608

주 : 2013년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계상

3 4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방안 마련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조항이 부재함
- 단, 기금 조합장이 기금 활용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임의 규정을 설정해놓은 상태임
- 그러나 성과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성과분석 방안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시, 성과분석 규정 제정, 성과분석 추진 주체 구성, 정량 및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피드백 과정 도입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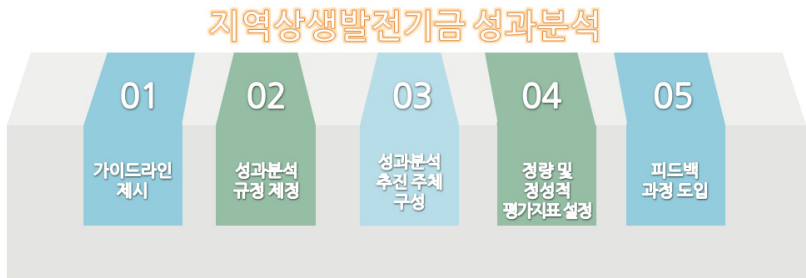


그림 6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지표(안)